"진상규명 우선" Vs "국정조사 하자"

■ 여야 '용산참사' 해법 시각차

한나라, 조기 문책론 차단 주력
민주당 "국무총리 책임 물어야"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해법을 놓고 여야는 21일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며 공방을 주고 받았다.

민주당은 경찰청장에 내정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인책을 주장한 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반면, 한나라당은 인책에 앞서 진상규명 선행을 주장하면서 야당의 정치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선(先) 진상규명, 후(後) 책임추궁'을 당론을 정하고 사고 발생 경위를 철저하게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긴급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먼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게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기 문책론'을 차단하자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서 신지호 의원은 "무단점거된 건물 옥상에서 불길이 확 솟았는데 누가 왜 화염병을 던졌는지가 사고의 열쇠"라며 경찰의 과잉진압을 비호하는듯한 발언을 해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

윤상현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용산사고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책임자 문책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회의에서는 야당이 이번 사고에 대해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한편, 한나라당 한선교 당 홍보기획본부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직자회의 결과, 한나라당은 '용산참사'와 관련한 TV토론 등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소속 의원들의 '입 단속'에 나섰다.

◇**민주당**='이명박식 공안통치가 빚은 정권 차원의 참극'으로 규정하고 대여(對與) 공세의 수위를 높여갔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은 정권 차원의 책임을 질 각오를 분명히 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이 대통령이 국민과 희생자, 유족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승수 국무총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사실상 총리의 사퇴 요구로 봐도 된다"며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농민대회 때 농민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대통령이 사과하고 경찰청장도 물러났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김 청장이 경찰청장에 내정되자마자 시위의 싹을 자르려고 개선장군처럼 오판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과 별도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추진키로 하고 이날 오후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82명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한 '이명박 정부의 용산철거민 폭력살상 진압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요구서'에서 "이명박 정부가 개각 발표 와중에 강력한 초기 대응을 통해 공안 철권통치의 기반을 공고히 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눈감은 두 청장 서울 용산 재개발 현장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원인규명 등을 위해 2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청장 내정자인 김석기(왼쪽)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어청수 경찰청장이 곤혹스런 표정으로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김석기 "책임 회피나 자리 연연 안해"

경찰청장 내정자인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1일 용산 재개발지역 농성자 사망사고 책임과 관련, 자신의 거취에 대해 "내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냐'는 무소속 이윤석(무안·신안)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경찰특공대 투입 당시 상부와의 상의 여부에 대해선 "이번 건에 대해선 제 상부와 상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무리한 진압이라는 지적에는 "사전에 충분히 상대측과 대화하면서 설득을 많이 했고 계속해서 이런 심각한 불법행위가 계속된다면 경찰 검거작전을 하겠다는 경고를 수차례 했다"고 말했다.

그는 "연행자 28명 중 7명만 그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이고 나머지는 그 지역과 전혀 관계없는 수원, 인천 등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 불법 점거 농성을 하며 화염병 투척 등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며 "철거민 사망자 5명 중 2명은 그 지역 세입자로 확인됐고, 2명은 외부에서 온 사람, 한명은 신원 확인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용산참사' 여파 설 이후 가능성

■ 행안부 장관·국세청장 인사 언제

용산 재개발 농성자 사망 사고 여파로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세청장 인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청와대가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 마련 등으로 분주하게 돌아가면서 인사안을 검토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 19일 개각을 단행하면서 함께 하려 했던 인사가 하루, 이틀 늦춰졌다가, 이제는 아예 설 연휴(25~27일)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청와대 내에서는 두 자리를 놓고 전면 재검토설까지 나오고 있다. 기존 인사 대상자들이 배제돼 가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행안부 장관의 경우 한나라당 의원 입각이 점점 힘을 얻어가는 분위기다. 당초, 이명박 대통령은 '1·19 개각'에서 정치인 배제 원칙을 내놨었다. 경제부처 수장들이 주요 인사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전문성이 요구된 데다 교체 폭이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치인 입각이 사실상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개각 결과에 대한 한나라당 내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궤도 수정의 흔적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행안부의 업무 성격에 비춰 굳이 전문가 중용의 원칙을 고수할 것만도 아니라는 분위기가 묻어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 인사를 발탁할 경우 당내 의견 수렴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이것 저것 고려할 사항이 많다.

친박 의원일 경우는 박근혜 전 대표와의 사전 조율 등 상황이 더욱 복잡해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인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 지연의 또 다른 이유로 '용산 사고'가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이 대통령이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 마련에 전력하면서 인사안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 청와대측 전언이다.

아울러 대형 사고에 직면한 상황에서 인사에 나설 경우 여론의 역풍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인사가 늦어지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중대한 사태가 벌어진만큼 이를 수습하고 민심 안정에 주력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인사는 사태 수습 이후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4대강 살리기' 등 담당 지역발전 비서관 신설

청와대는 21일 지역발전 종합대책과 '4대강 살리기' 등을 담당할 지역발전비서관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 및 비서관급 후속 인선을 단행했다.

국정기획수석실 산하 국책과제비서관에는 김동연 경제금융비서관이 자리를 옮겼으며, 임종룡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이 경제금융비서관에 임명됐다.

또 국정기획수석실 산하에 신설되는 지역발전비서관에는 오정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이 임명됐다.

오 단장은 지난 5월 국정기획수석실 산하 국책과제2비서관으로 임명된 후 청와대 조직 개편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자리를 옮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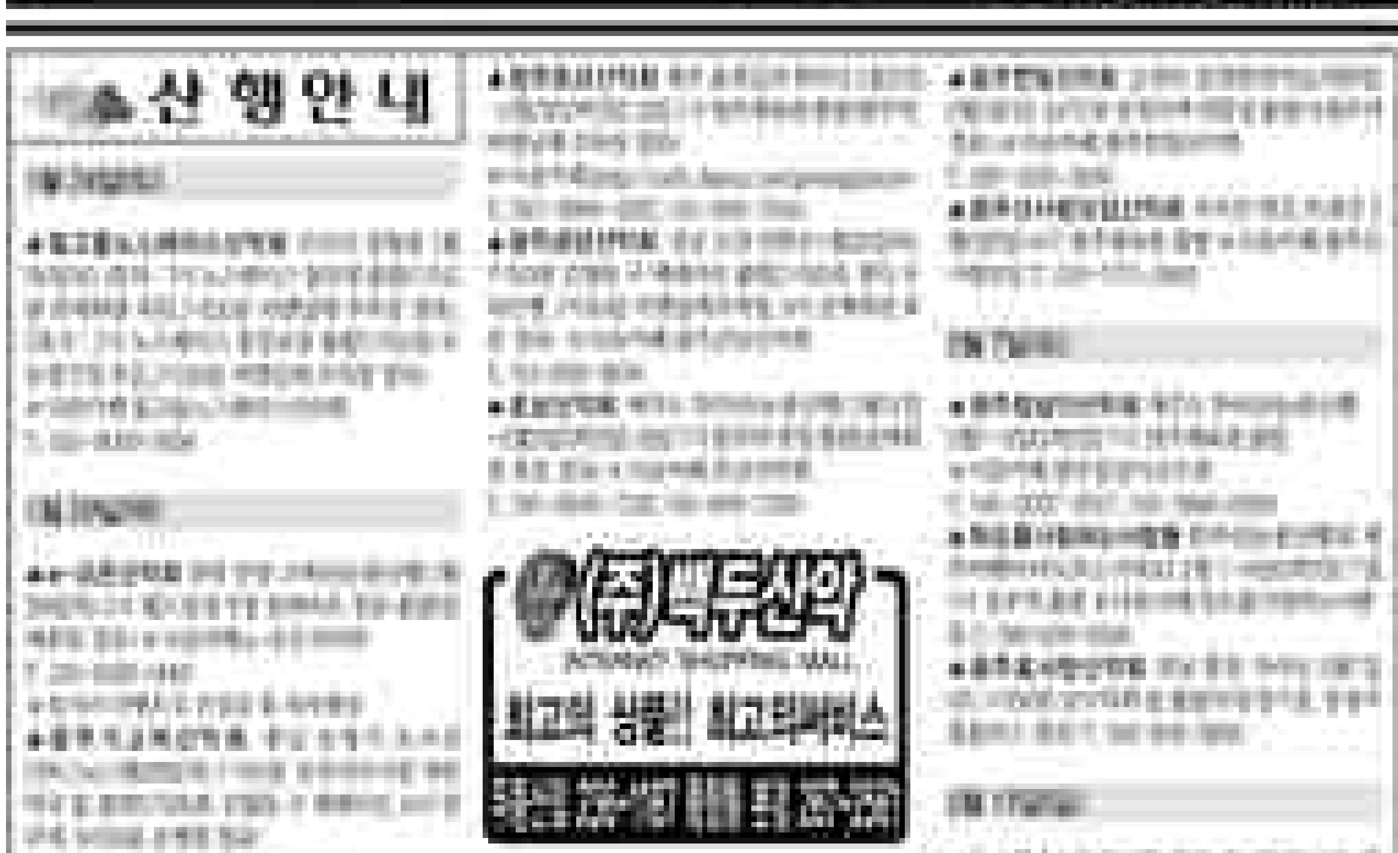
앞서 청와대는 20일 문화체육관광비서관에 함영준 민정1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통일비서관에 정문헌 전 한나라당 의원, 시민사회비서관에 현진권 아주대 교수, 환경비서관에 한화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을 각각 임명한 바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道의회 '영산강 특위' 구성 생태환경 복원사업 지원

전남도의회는 21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영산강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영산강 생태환경 복원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부터 2010년 6월까지 활동하게 되는 '영산강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이기병 위원장(나주 1·민주당) 등 10명의 위원이 활동하며, 앞으로 영산강 프로젝트사업이 치수사업과 수질개선이 중심이 되는 생태환경 복원사업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영산강 주변의 역사·문화 복원과 함께 강변도로 개설을 통한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한 사업과 도민들의 요구사항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특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산강 프로젝트 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을 30%에서 40%로 높여 주도록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지난 14일 임시회를 개최해 8일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